

여성+퀴어 ≠ 유권자? 2026 여성퀴어 있는 지방선거 질의 캠페인  
서울 유권자가 바라는 정책

lsangdam@hanmail.net  
사무국 활동가 채원



서울의 내일을 묻다

**여성 성소수자 유권자가  
꿈꾸는 서울**

# 목차

## 01. 캠페인 개요

여성+퀴어≠유권자? 2026 여성퀴어  
있는 지방선거 질의 캠페인 진행 현황

## 02. 여성 성소수자 유권자 질의 데이터

주요 응답 분포 | 핵심 키워드 분석

## 03. 핵심 결과 해석

안전·의료·교육·문화 영역에서  
지역 정치에 기대하는 변화

## 04. 여성 성소수자 유권자가 요구하는 서울

숫자 뒤의 목소리 | 구체적 요구

## 05. 여성 성소수자 정책 제안 4대 영역

서울 안의 불균형 | 안전한 서울

# 여성+퀴어≠유권자? 2026 여성퀴어 있는 지방선거 질의 캠페인



후보질문참여



## 2026 여성퀴어 있는 지방선거 질의 캠페인

### 여성+퀴어≠유권자? 2026 여성퀴어 있는 지방선거 질의 캠페인

2026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 퀴어 유권자가 직접 질문을 모아 후보자에게 전달합니다.

선거에서 여성 퀴어의 삶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고, 많은 여성 퀴어들이 정치와 자신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그 단절을 드러내고 질문으로 연결하며, 여성 퀴어 유권자의 존재를 가시화하기 위해 시작합니다.

질문을 남겨주시면 한국레즈비언상담소에서 각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후보자의 응답은 비교·정리되어 공개됩니다. 후보자의 무응답도 기록합니다.

질문을 통해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화를 만드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 여성 퀴어의 질문을 기다립니다.

**거시적인 질문, 생활밀착형 질문, 엉뚱한 질문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 ✓설문은 약 3분이 소요됩니다.
- ✓답변은 익명으로 수집되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 ✓보내주신 질문은 일부 편집되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lsangdam@hanmail.net ([한국레즈비언상담소](http://www.klsc.or.kr) 사무국)

\* 표시는 필수 질문임

- Q. 우리 동네, 여성 성소수자가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살 수 있나요?
- Q. 시청·구청·교육청은 생활·건강·주거·노동·교육·공간을 어떻게 지원하나요?
- Q. 예산·제도·기준 어떻게 실행하나요?

#### 참여 안내

- ✓ 묻고 싶은 후보만 질문 가능
- ✓ 짧게, 편하게 작성
- ✓ 일부만 답해도 충분

국회/중앙정부 질문은 저희가 정리합니다  
다양한 질문을해주세요!

우리는 다양한 삶을 가진 유권자입니다.

질문을 모아 전달하고  
응답은 비교·정리 후 공개됩니다.

질문하고 싶은 지역이 어디인가요? \*

예 : 00도 00시 00구

내 답변

#### 한눈에 보는 지방 선거

지선은 크게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교육감, 지방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b>광역자치단체장</b>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전체 정책·예산의 큰 방향을 정하는 사람 →전체 제도 바꾸기	<b>기초자치단체장</b> 시장, 군수, 구청장 내 자치구·군 생활 문제를 직접 처리하는 사람 →내 동네 공간/서비스 바꾸기
<b>교육감</b> 학교와 교육정책을 맡는 사람 →학교와 청소년 환경 바꾸기	<b>지방의원</b>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 시·도·구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사람

시장, 도지사에게 가장 바라는 것 (최대 3개)

\*참고: 광역자치단체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은 도·시 전체 예산안을 편성하고 주요 정책 방향을 수립합니다.

- 공공기관 채용/서비스 전반 차별금지 원칙 도입
- 퀴어 문화 행사 - 광장·공공장소 이용 보장
- 가정폭력·혐오폭력 피해 긴급 쉼터 마련
- 탈가정 청년/청소년 성소수자 쉼터 마련
- 건강검진·상담 서비스 접근성 확대
- 공공의료기관/보건소에서 성소수자 친화 진료 가이드라인 도입, 교육 실시
- 공공의료기관에서 '동거인/파트너'도 보호자로 인정 운영 기준
- 주거·복지 지원 대상 기준·서류 절차 완화 (동거인 등 다양한 관계 고려)
- 기타: \_\_\_\_\_

1

교육감에게 가장 바라는 것 (최대 3개)

\*참고 : 교육감은 학교 교육과정, 학교 정책과 예산을 총괄합니다.

- '포괄적 성교육' 도입, 다양성 교육 확대
- 위기 상담, 외부 지원 연계 강화
- 괴롭힘·차별 익명 신고, 보호 시스템
- 학교 도서관 내 퀴어, 페미니즘 도서 검열 없이 운영
- 인권 교육, 성교육 - 교사 연수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성소수자 교사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 기타: \_\_\_\_\_

2

지방의원에게 가장 바라는 것 (파트 구분없이 최대 3개)

\*참고 : 지방의원(시·도의원·구의원)은 시·도·구 예산을 심의, 확정하고 조례를 만들거나 고치고 행정을 감시합니다.

- 예산 - 성소수자 관련 정책 예산 확보
- 예산 - 여성 관련 예산 삭감될 때 대응 방안 마련
- 조례 - 혐오·차별 금지에 대한 조례 발의
- 조례 - 성평등/인권/청소년/주거 관련 조례 발의, 개정
- 감시 - '다양성/인권 정책' 후퇴 시, 의회 차원 문제 제기
- 감시 - 의회에서 여성 성소수자 관련 이슈를 공개적으로 다룰 의지
- 기타: \_\_\_\_\_

3

(선택) 꼭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 질문이 있다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장문형 텍스트

4

(선택) 캠페인 결과 및 소식을 받아볼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수집된 이메일은 캠페인 종료 후 파기됩니다.

내 답변

5

답변 감사합니다 🌈  
질문이 많을수록 우리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 이 링크를 주변의 여성 퀴어에게 공유해주세요.

📌 [L상담소](#) [지방선거 후보-질문 모으는 중! 3분이면 완료](#) 🙏



6

QR로도 참여 가능!  
캡처해서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

# 캠페인 현황

## 1. 캠페인 기획 및 목표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 성소수자의 안전·권리 의제를 지역 정치에 질문하는 질의 캠페인 진행
  - 후보자들의 인식·정책 태도 확인 및 지역 정치 내 여성 성소수자 의제 가시화 목표
- 
- 전체 흐름: 의제 설정 → 질의 설계 → 후보자 접촉 → 응답 분석 → 결과 공개

## 2. 기획단 운영 및 내부 준비

- 3월 중순 ~ 3/27 : 기획단 모집 및 확정
- 4/3 : 초동회의 진행 (캠페인 목적·메시지 톤·활동 방식 논의)
- 지역 참여자 온라인 회의 병행 (매주 밀도 높은 회의 진행)
- 4/15 : 유권자 질문 폼 게시
- 4/24 : 레즈비언 가시화의 날 기념 캠페인 중간점검 게시물 업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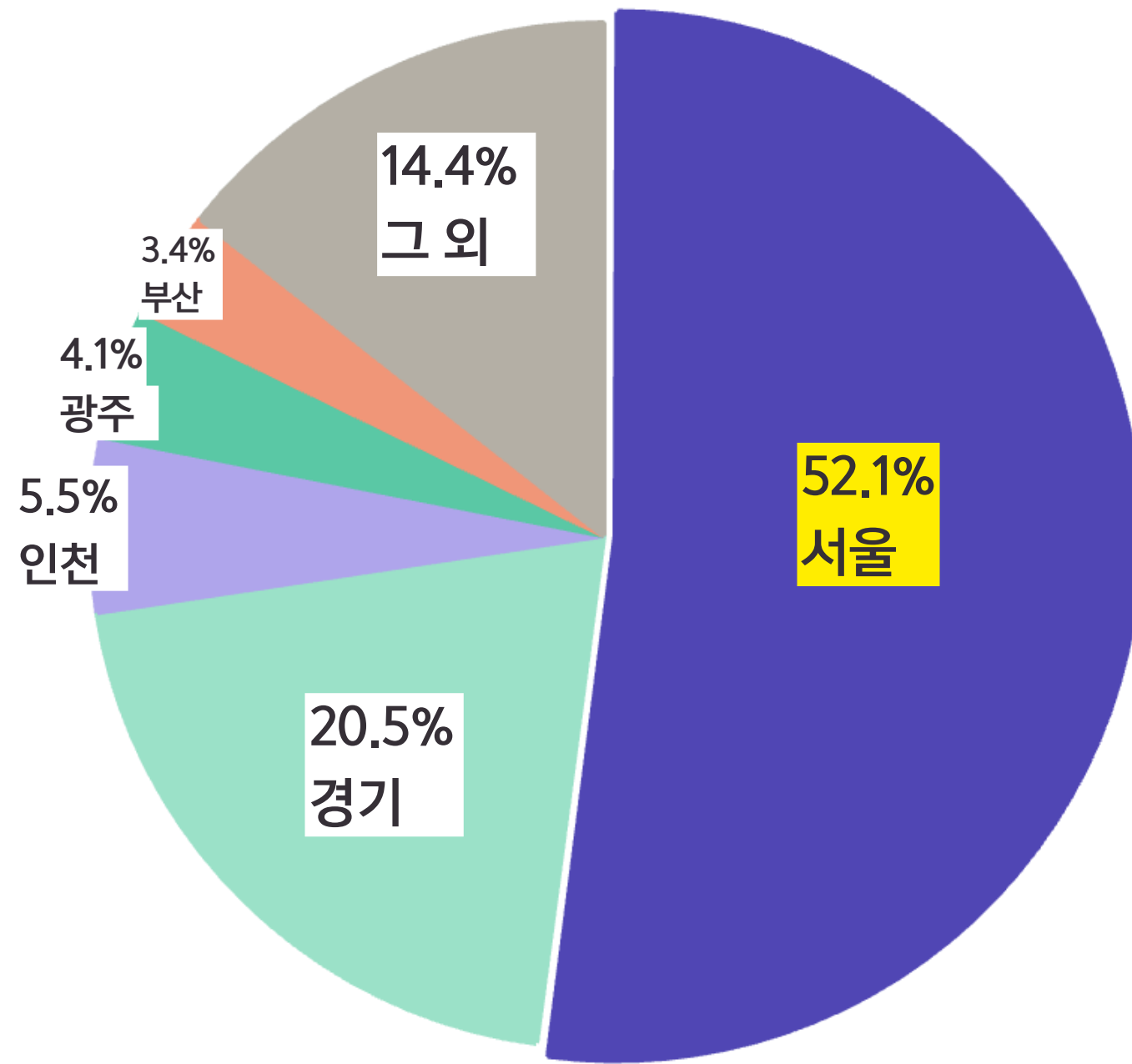
## 3. 질의서 제작 및 후보자 접촉

- 4/27~29 : 질문 정리 및 질의서 작성
- 4/29 : 유권자 질문 폼 마감
- 주요 질문: 여성 성소수자 안전 정책, 혐오범죄 대응, 차별금지 정책, 지역 인식 등
- 4/30 : 1차 발송 완료 (광역단체장 후보 - 이메일 발송)
- 5/14 : 2차 발송 완료 (기초단체장·시·도의원·구·군의원 후보)
- 5월 중순 : 3차 발송 예정 (교육감 후보)

## 4. 응답 분석 및 결과 공개

- 5/14 : 1차 발송 답변 마감
  - 5/26 : 2차 발송 답변 마감
- 
- 5/15~ : 후보자 답변 아카이브 홈페이지 제작 및 운용
  - 응답 정리 및 후보 비교표 제작
  - 지역별 응답 분석 및 콘텐츠 제작 예정
  - 5/27 : 결과 공개 및 보도자료 배포 예정
  - 향후 여성 성소수자 정책 아카이브 및 의제 활동 자료로 활용

# 전체 데이터 개요



총 응답 수: 146건

그 중 서울 응답 수: 76건

# 전체 데이터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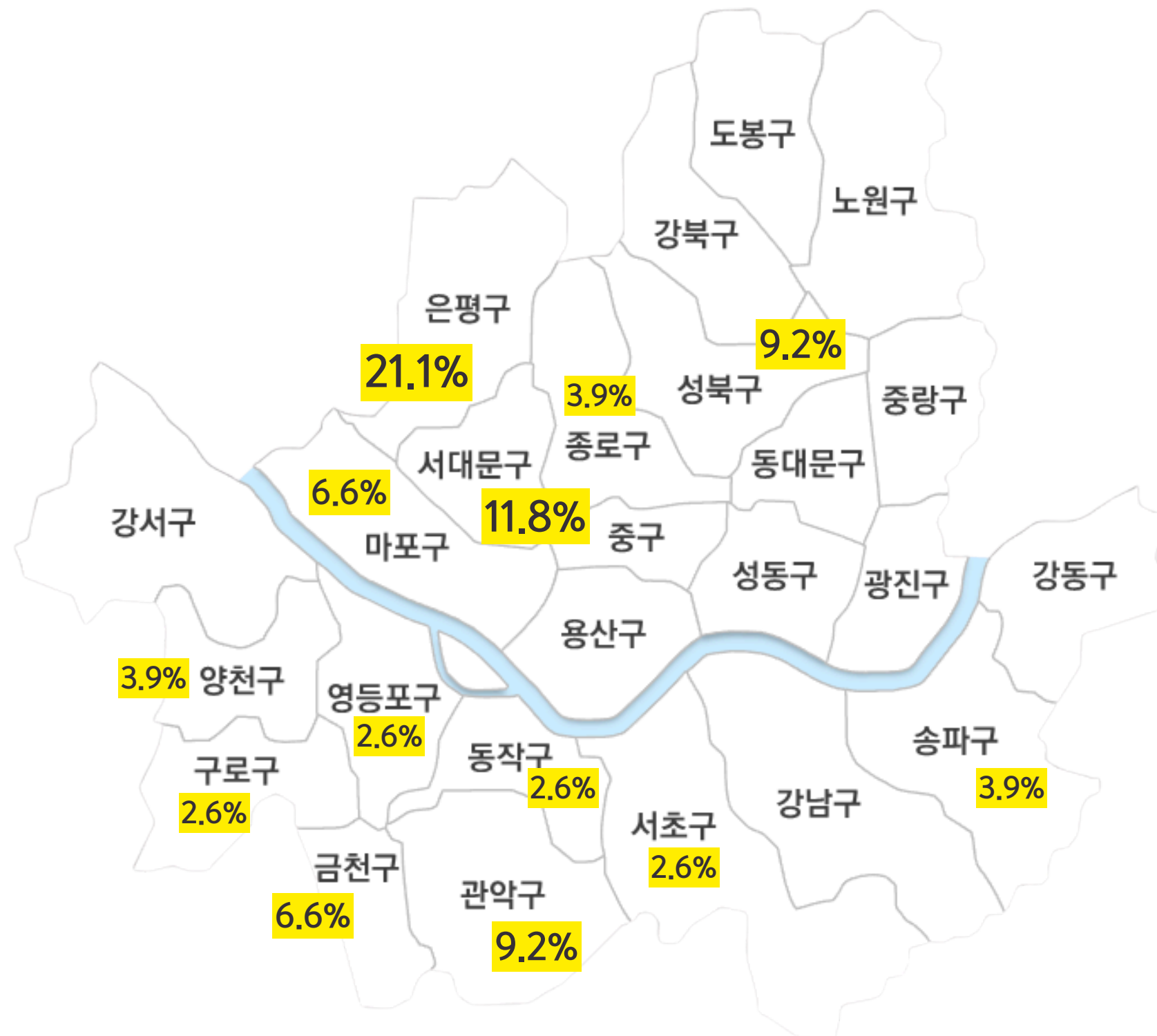
서울 응답 수: 76건

서울 23개 구에서 응답.

은평구(16명), 서대문구(9명), 관악구·성북구(각 7명) 순으로 많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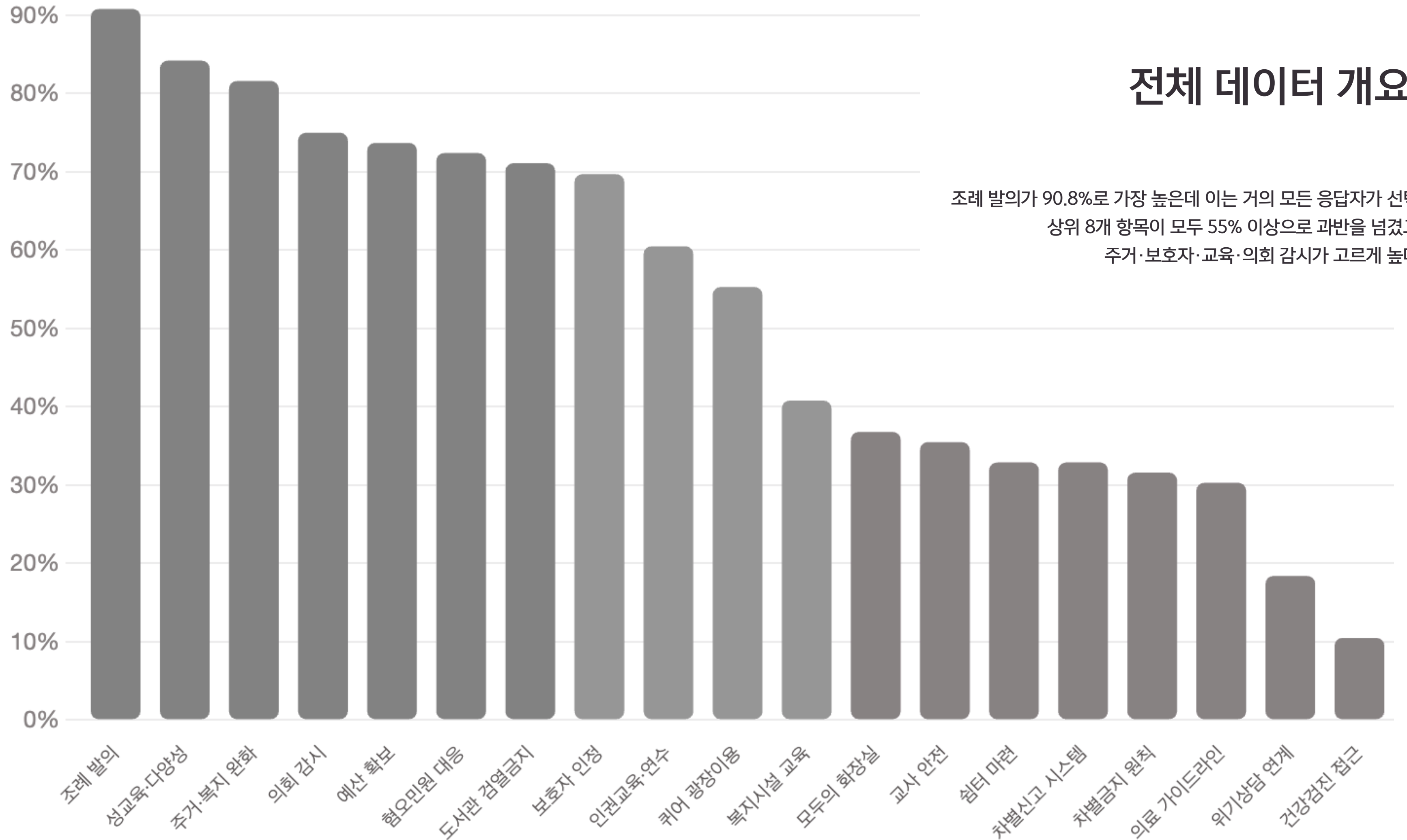
1명 이하인 지역: 강서, 도봉, 노원, 강북, 중랑, 동대문, 광진, 성동, 강동, 강남, 용산, 중구

응답자의 19%(15명)는 자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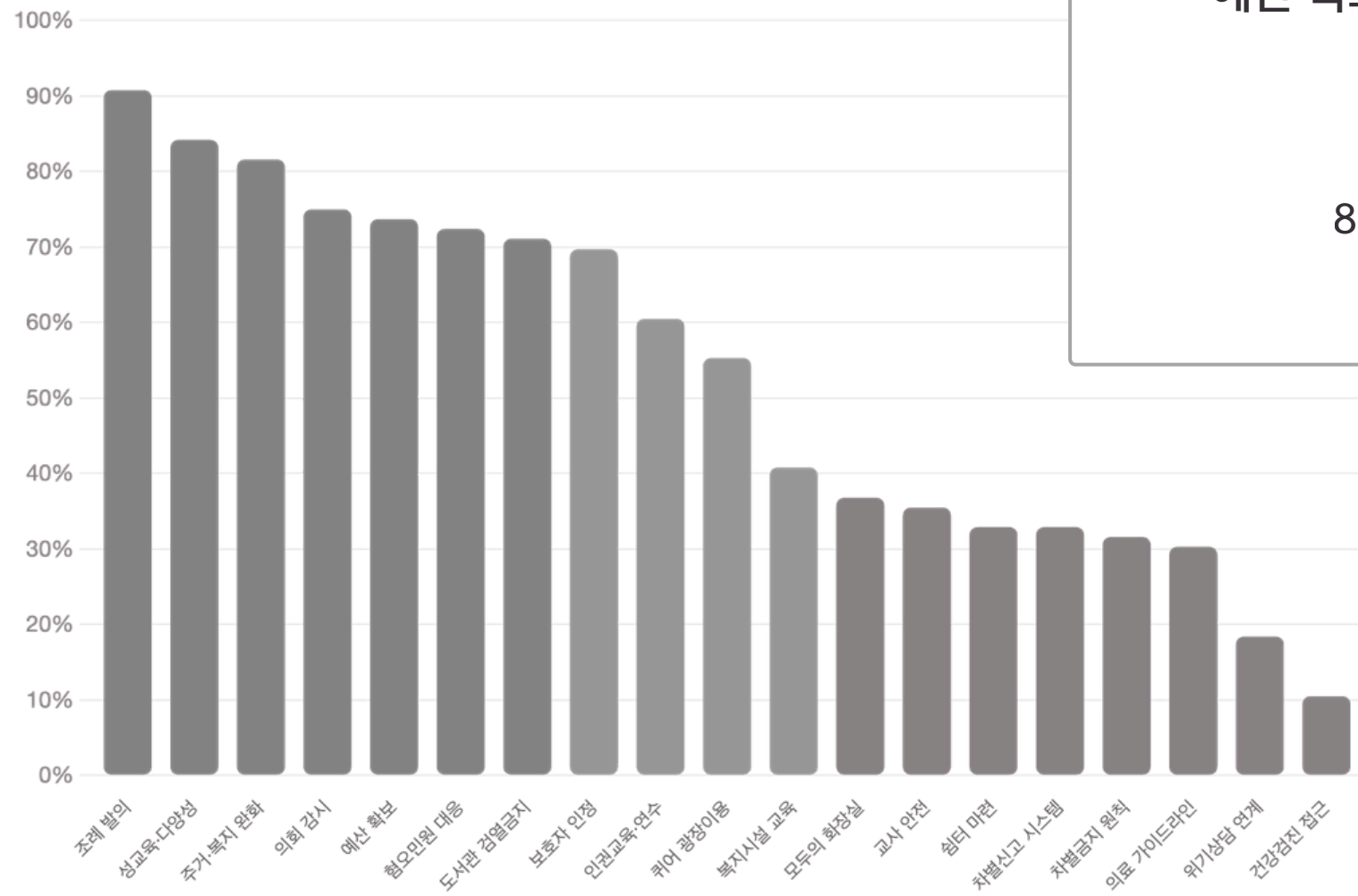


# 전체 데이터 개요

조례 발의가 90.8%로 가장 높는데 이는 거의 모든 응답자가 선택.  
상위 8개 항목이 모두 55% 이상으로 과반을 넘겼고,  
주거·보호자·교육·의회 감시가 고르게 높다.



# 핵심 해석



## ① 핵심 제도 요구

- 보호자 인정
- 성교육
- 주거 기준 완화
- 예산 확보

80% 이상

## ② 현장 갈등 영역

- 도서관
- 혐오 민원
- 의회 감시

70%대

## ③ 인프라 부족

- 쉼터
- 의료

50~60%대

# 여성 성소수자 유권자가 요구하는 서울

## 제도가 우리 삶을 인정하게 하라

구청장에게 1위: 주거·복지 절차 완화  
(72%, 55명)

시장에게 1위: 파트너 보호자 인정  
(67%, 51명)

- 이 두 요구가 카테고리별로 압도적 1위를 차지
- 이는 서울에 살면서 동거인·파트너 관계를 행정적으로 설명하거나 숨겨야 하는 상황이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의미
- 주거 신청서에서, 병원에서, 복지관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구조적 배제

→ 제안: 서울시 및 각 자치구 복지 서비스 신청 서류에 **'동거인·파트너'를 사실혼에 준하는 관계로 인정**하는 내부 운영 기준 마련  
서울시립병원 **보호자 인정 기준** 개정

# 여성 성소수자 유권자가 요구하는 서울

## 병원에서, 주민센터에서

### 숫자 뒤의 목소리 (자유응답 발췌)

- "동성 파트너와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이 너무나도 큼니다. 주거권, 생존권,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으로서 유권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를 가시화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해줄 후보자가 필요합니다."  
— 서울시 마포구 거주 여성 퀴어
- "이성 간의 혼인만 법적 혼인으로 인정되어 신혼부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동거인에 관한 법이라도 더 발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서울시 관악구 거주 여성 퀴어
- "의료부문 및 주거정책에서 파트너와의 관계를 꼭 인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울시 서대문구 거주 여성 퀴어

# 여성 성소수자 유권자가 요구하는 서울

## 학교는 안전한가

교육감에게 1위: 포괄적 성교육·다양성 교육 확대 (84%, 64명)  
+ 교사 안전·검열 반대

- 전체 카테고리 중 가장 높은 응답률
  - 주목할 점은 교사 연수(60%), 학교 도서관 검열 반대(57%), 성소수자 교사 안전(35%), 차별 익명 신고 시스템(32%)이 함께 요구
  - 학교라는 공간을 학생과 교사 모두가 안전하게 존재할 수 있는 곳으로 바꾸라는 요구
- 제안: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성소수자 학생·교사 보호 가이드라인 수립.  
학교 도서관 도서 선정 기준에서 다양성 도서에 관한 검열 삭제

# 여성 성소수자 유권자가 요구하는 서울

도서관과 광장에서도 혐오 민원 방지 55%, 퀴어 행사 광장 이용 55%

- 구청장에게 2위: 혐오 민원에 의한 프로그램 위축 방지 (55%, 42명)
- 구청장에게 3위: 도서관·문화공간 검열 반대 (51%, 39명)시장에게 3위: 퀴어 문화 행사 광장 이용 보장 (55%, 42명)
- 도서관, 복지관, 광장 등 **가장 일상적인 공공 공간에서의 배제 문제가 세 번째로 강한 요구로 나타남**
- 조직적 혐오 민원이 실제로 서울 곳곳에서 공공기관의 운영 방침을 바꾸고 있다는 경험의 반영

→ 제안: 각 자치구 도서관·복지관 운영 지침에 혐오 민원 대응 프로토콜 명문화.

서울시 공공장소 사용 허가 기준에 신청 단체의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리 금지 조항 신설.

# 여성 성소수자 유권자가 요구하는 서울

## 의회에 요구하는 것 — 조례·예산·"침묵하지 말 것"

- 지방의원 1위: 혐오·차별 금지 조례 (65%, 50명)
- 지방의원 2위: 성소수자 정책 예산 확보 (52%, 40명)
- 지방의원 3위: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다룰 의지 (50%, 38명)
- 의원에게 바라는 것 중 3위가 "침묵하지 말 것"이라는 점. 단순한 입법 요구를 넘어, 의원이 적극적으로 이 의제를 공론장에 올려 놓으라는 요구.
- 다양성·인권 정책이 후퇴할 때 의회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라는 요구(39%)도

→ 제안: 서울시의회 및 각 구의회에 혐오·차별 금지 조례 발의 의지를 공개적으로 요청. 후보자 응답 여부를 캠페인 결과물로 공개.

# 서울에 묻는다

## ① 서울 안의 불균형 — 구마다 다른 응답, 같은 요구

구를 가로지르는 공통점: 어디에 살든 같은 요구

은평구(16명)와 서초구(2명)는 생활권도, 정치적 성향도 다른 구예요.

두 구 모두에서 주거 절차 완화, 파트너 보호자 인정, 포괄적 성교육, 혐오·차별 금지 조례가 공통으로 선택.

이는 특정 지역의 이슈가 아닌 서울 전체 여성 성소수자의 구조적 문제임을 드러냄.

강남·노원·중랑·강서 등은 응답자가 0~1명.

퀴어 커뮤니티의 네트워크가 닿지 않는 곳,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곳이 서울 안에도 있다.

→ 제안: 단순 집계가 아닌 접근성의 불균형 자체를 의제로 삼을 것.

강남·노원 등 응답 공백 지역 후보자에게도 질의서를 보내야 하는 이유.

# 서울에 묻는다

## ② 서울이 더 안전한 도시여야 한다는 기대 (자유응답 발췌)

"대구에 정주하고 싶지만 여자친구와의 삶이 순탄치 않을 것 같아 수도권으로의 이주를 고민하고 있는 30대 레즈비언입니다. 제가 원하는 건 여자친구와 같이 살더라도 이웃들, 직장 동료들에게 쫓겨나지 않고, 신혼여행 휴가와 회사 차원의 축의, 기혼자로서 법적 지위와 대우를 받으며 제 집과 제 직장에서 차별없이 살아가는 미래인데요... 그게 다른 분들에게 많이 문제가 될까요? 저는 성실한 노동자이고 납세자인데... 구군에서 도와주시면 안될까요?" — 대구 거주, 수도권 이주를 고민 중인 30대 레즈비언

"공적인 영역/광장에서부터 다양성을 인정하고, 배척이 아니라 함께 살고자 하는 사회에 미래가 있으며 시민들이 숨을 쉬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 서울시 은평구 거주 여성 퀴어

"선거 때만 되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식의 애매모호한 입장을 표하는 걸 자주 목격합니다. 누군가가 존재함을, 마땅히 존중 받아야 할 인권을, 저마다 부단히 살아가는 인생을 도대체 왜 합의해야 하는 건가요?" — 서울시 은평구 거주 여성 퀴어

"차별과 혐오는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적극 행정으로 사회의 질병을 치료하세요. 침묵은 혐오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 서울시 중랑구 거주 여성 퀴어

# 우리가 제안하는 것 — 4개 영역 핵심 제안 요약

	<p>포괄적 성교육과 다양성 교육을 서울시 교육과정에 실질적으로 도입.</p> <p>학교 도서관 도서 선정에서 정체성을 이유로 한 검열을 중단하고, 성소수자 학생과 교사가 안전하게 존재할 수 있는 환경.</p> <p>교사 연수 프로그램에 인권·다양성 교육을 의무화 제안</p>	<p>서울시의회와 각 구의회에 혐오·차별 금지 조례를 발의.</p> <p>성소수자 관련 정책 예산을 삭감이 아닌 확보의 방향으로 논의.</p> <p>여성 성소수자 관련 이슈를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다루고, 다양성·인권 정책이 후퇴할 때 의회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 제안.</p>
--	--	---

**[주거·의료] 제도가 우리 삶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육] 학교는 모두에게 안전해야 합니다**

**[공공서비스] 공공기관은 압력이 아닌 원칙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입법·예산·감시] 의회는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울시립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의 보호자 인정 기준에 '동거인·파트너'를 명시적으로 포함,

각 자치구 복지 서비스 신청 서류와 절차에서 혼인·혈연 중심의 기준을 완화하고, 다양한 관계를 인정하는 내부 운영 기준 마련 제안

도서관·복지관·문화공간의 운영 지침에 혐오 민원 대응 프로토콜을 명문화.

서울시 공공장소 사용 허가 기준에서 신청 단체의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리를 금지.

공공 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다양성 교육을 정례화 제안

도서관·복지관·문화공간의 운영 지침에 혐오 민원 대응 프로토콜을 명문화.

서울시 공공장소 사용 허가 기준에서 신청 단체의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리를 금지.

공공 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다양성 교육을 정례화 제안

서울시의회와 각 구의회에 혐오·차별 금지 조례를 발의.

성소수자 관련 정책 예산을 삭감이 아닌 확보의 방향으로 논의.

여성 성소수자 관련 이슈를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다루고, 다양성·인권 정책이 후퇴할 때 의회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 제안.

# 후보자 질의서 답변 공개

참여해주신 후보자들의 답변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정의당



**여인두 목포시장 후보**

전라남도

[답변서 보기 →](#)

정의당



**김찬우 파주시의원(가선거구)**

경기도

[답변서 보기 →](#)

노동당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모든 지역

[답변서 보기 →](#)

진보당



**홍성규 경기도지사 후보**

경기도

[답변서 보기 →](#)

여성의당



**유지혜 서울시장 후보**

서울특별시

[답변서 보기 →](#)

정의당



**강은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답변서 보기 →](#)

정의당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

서울특별시

[답변서 보기 →](#)





☀ 서울 어디에나 여성 성소수자는 존재합니다  
우리는 계속 나아가고, 질문하고, 연결될 것입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여성 성소수자의 삶과 안전, 권리를 기록하고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홈페이지] <https://lsangdam.org/>

[문의] [lsangdam@hanmail.net](mailto:lsangdam@hanmail.net)

[후원]



여성+퀴어 ≠ 유권자? 2026 여성퀴어 있는 지방선거 질의 캠페인: 서울 유권자가 바라는 정책